



정의 없는 평화 없다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필요하다

미국 흑인 반란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

▶ 6~7 면

우석균 강연
한국 의료 민영화의 미래인
미국 의료의 현실

▶ 8~9 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 10~11 면

조희연 교육감 비판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하라

▶ 12 면

서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15 면

누구의 말일까요?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혼을 건 ‘조국의 주춧돌’”

아베가 A급 전범들을 기리는 비석에
바친 메시지

“[박근혜가] 한 달 전쯤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김장수와 전 국정원장 남재
준 두 분을 격려한 걸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날 시간은
없다더니

“예전에 5·16혁명 전에 민간단체들
이 국회에 난입해서 여러 행동했던 그
런 모습을 상기시킨다.”

새누리당 정우택,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국회 농성에 대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가족들이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질 것”

염수정 추기경,
교황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추기경이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을 ‘유가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 진상규명에
대해 두려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정
부·여당이야말로 유가족의 처참한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마산교구 대표 하춘수 신부

“법률용어 들먹이며 장난치지 마라.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다.”

〈경향신문〉김민아 논설위원,
‘자력구제’라며 기소권·수사권 부여 거부하는
새누리당에게

“원전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할까 위험
할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
다. 저는 원전에 대해 무조건 믿고 있
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믿음 부족 탓?

“청년들이 너무나 쉬운 일만 선호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

새누리당 김무성,
그런 생각하는 당신이 큰 문제

“[윤일병 구타 사망] 당시에 신고를 안
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구타와 관련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가 제일 중요
합니다. 그것만 되면 어떤 구타도 발생
되지 않거든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이 있으
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도 상황 파악 못한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

“이번 주 내에 단식투쟁보다 1만 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에 돌입한다.”

자유대학생연합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함원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
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며 “안정적
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
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
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놔다.

물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
적 연금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
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평균
의 4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와 헝가
리의 경우, 노인 소득의 85퍼센트가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
장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 등이
주도한 개악으로 누더기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도입 당시 70퍼센트이던 국민연금
의 소득대체율은 이제 40퍼센트로 낮
아져 말 그대로 ‘용돈연금’이 됐다. 게
다가 소득대체를 40퍼센트라도 받으

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 동안
이나 내야 한다. 2060년이 되도 평균
납입 기간은 21.3년이어서 실질소득
대체율은 26.9퍼센트에 머물 전망이
다.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오
랜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등 전체 노
동자의 절반가량은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
장 낮은 0.9퍼센트밖에 안 된다. 꼴
찌에서 2위인 나라조차 이 비율은
3.6퍼센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
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정
부 지원을 늘려 국민연금과 같은 공
적연금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마
땅했다.

주식시장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내놔
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급여형(DB :
연금으로 받을 액수를 정해 놓는 것,
원금보장형)보다 확정기여형(DC :
기금운용수익률에 따라 액수가 달라
지는 것, 원금 손실 가능) 상품을 늘
리도록 했다. 또 기금 중에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율도 완화할 예정
이다.

그러나 노동자 노후 소득의 원천
인 퇴직금을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말
그대로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장 많이 운용
하는 삼성생명의 원리금보장상품 수
익률은 올해 1분기 0.8퍼센트로 ‘제
로 수익률’에 가깝다.

HMC투자증권, 신한은행, 우리은
행, 국민은행 등도 수익률이 1퍼센트
가 안 된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LIG손해보험, 대우증권, 흥국생명,
IBK연금보험 등은 아예 수익률 자체
가 마이너스다.

이런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누구도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보험사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보너스
를 독둑하게 챙겨 가겠지만 말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92퍼센트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도 이 때
문이다.

게다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당연
히 노후 소득 격차는 지금보다 더 커
질 수 있다.

퇴직연금 강화 방안이 발표되자,
주식시장은 이미 ‘단기적으로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유입되고 안정적으
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돈이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내맡기고, 퇴
직금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패
기돼야 한다.

▶ 관련기사 16면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이현주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
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베노믹스는 시중에 대규모로 돈
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
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겠다
는 계획이었다. 무제한적 금융완화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와 정부
재정 지출 확대(20조 엔), 규제 완화
와 같은 ‘성장 전략’이 그 구체적 내용
이다.

지난해 4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
다. 지난 한 해 동안 닛케이 평균 주가
가 56퍼센트 상승했다. 물가상승률
도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일본 경제는 지난 20년 가
까이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
고 있다.

아베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엔화 가
치가 떨어졌음에도 지난해 일본의 수
출은 오히려 줄었다. 계속되는 세계
경제 저성장 상황에서 일본의 핵심
수출품인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미진
한 탓이다.

반대로,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면
서 에너지 수입이 대폭 증가해 무역
적자가 심화했다. 올 7월 일본의 무역

수지는 9천6백40억 엔 적자로 25개
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지난해 수출기업들의 영업이
익은 크게 올랐다. 대표적으로 도요
타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의 영
업이익이 그 전년보다 73.5퍼센트 증
가했다.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이
후 6년 만에 최고 액수다. 수출 물량
이 늘진 않았지만 엔저 때문에 엔화
표시 수출 단가가 오른 덕분이다.

그러나 이익 확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지난
1년 동안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1~2퍼센트대의 증가에 머물렀다. 올
해는 그보다 더 증가했다고 하지만,

더 가난해진 노동자들

수출 기업들은 엔저로 큰 이익을 얻
었지만,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베
노믹스 시행 전보다 더 가난해졌다.

아베가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촉
구했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
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목임금이 소
폭 늘긴 했다(3백인 이상 대기업을
2.41퍼센트, 중소기업은 1.84퍼센
트). 그러나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그조차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전과
견주면 한참 적고, 2012년보다도 약
간 많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
가지로,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상황
이 나아지기를 바라며(특히, 이윤을
회복) 3백조 엔이 넘는 현금을 쌓아
두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 가격을 낮춰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보다는 당장 이윤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통화량 부족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음
을 보여 준다.

아베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중앙은

따라가지 못했다. 즉, 실질임금은 오
히려 하락했다.

일본인 다수가 아베노믹스의 효과
를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거기다 아베노믹스의 셋째 ‘화살’인
‘성장 전략’은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
연화, 각종 규제 완화, 민영화 등 신자
유주의 정책들이 핵심이다. 이것은 기

아베노믹스보다도 못한 초이노믹스

최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41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내놔다.
최경환의 경기부양책은 ‘한국판 양적
완화’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도 불
린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난
1년 반을 보면 초이노믹스의 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아 보인다.

더구나 초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
보다 정부 재정지출의 절대적 규모나
통화정책의 추진 강도 면에서 훨씬 빈
약하다. 예컨대, 정부 재정지출 부문
을 보면, 일본은 GDP 대비 2.7퍼센트
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한국

행이 실시한 양적완화 수준보다 갑절
이상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 그러
나 여전히 일본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
다. “일본 경제는 2008년 대침체 이후
에 한 해 1퍼센트 이하로 확장해 왔을
뿐이다. 아베 정부 하에서 성장률은
1.8퍼센트까지 올랐지만, [이조차] 위
기 전보다는 여전히 나을 게 없다.”(마
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양적완화와 정부 재정지출이 기업
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 준 것은 분명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역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아
베노믹스가 악화시킨 국가 채무 문제
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업들의 이윤 증대에는 분명 도움을 주
겠지만 노동자들을 더한층의 저임금
과 빈곤,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게 만
들 것이다.

“아베노믹스 이면의 진정한 의제는
일본 가계의 생활 수준을 쥐어짤으로
써 일본 자본의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마이클 로버츠의 지적이
타당해 보이는 이유다.

은 GDP 대비 0.8퍼센트 수준이다.

이것은 일본에서처럼 일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
지만, 아베노믹스보다도 더 빨리 약발
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
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김문성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는 것도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는 “[진도 체육관] 이틀째부터 정부가 나를 밥 먹는데까지 계속 따라다녔다”며 정부의 통제 시도도 폭로했다.

그러나 “단식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극한 대치를 누그러뜨리고 타협의 물꼬를 트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협상에 기대를 걸자는 자유주의적 진단은 자의적인 것이다. 바로 그런 해석을 우려해 김영오 씨는 단식 중단 기자회견 도중 가족대책위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내 “문재인 의원 등 단식 중인 의원들에게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 장외 투쟁 중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단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뜻”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진실 규명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뻔뻔하다. 단식 중단이 자신들의 면담 등 소통 노력 때문이란단. 가족대책위는 곧바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과의 면담은 별 무소속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지기커녕 진실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국가정보원이 김영오 씨 주치의를 불법 사찰한 일도 들쭉났다. 심지어 박근혜는 세월호 생존 학생들의 면담 요구도 외면했다. 생존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고 말한다. 눈앞에서 구경만 하던 해경들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적반하장으로 박근혜는 참사 원인의 일부인 친기업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도리어 확대하려 한다.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 구조를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유가족과 나머지 노동계급의 삶도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영오 씨가 병원에 실려간 6일 동안 동조 단식자가 전국에서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8월 27일 급속노조 경기지부가 파업 후 광화문으로 집결해 ‘김영오 조합원 생명살림 급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홈플러스노조는 29일 파업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촉구 집회를 하고 광화문으로 행진했다.



홈플러스노조가 8월 29일 전면 파업을 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 촉구 집회를 개최한 것은 모범 사례다.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호도했다. 8월 26일 경제부총리 최경환,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나서서 경제 살리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영산대 한성안 교수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듯이, 세월호 참사와 경기 위축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기업 이윤 등 부자들의 수익을 가리키는 기업주들과 그 정치인들의 코드명이다. 그래서 박근혜가 안달하는 ‘민생’ 대책은 카지노와 영리 병원 허용, 크루즈산업 육성 등 기업주 돈벌이에 관한 것들뿐이다.

박근혜는 심지어 이번 일을 “재난 재해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안전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까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 말했다. ‘안전’ 부문 민영화 등 재난을 본격적으로 상품화·시장화하자는 것이다. 8월 12일 내용은 ‘제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 지향적 정책들로 가득하다.

바로 그런 정책들이 세월호 참사의 일부 원인들이었다. 참사를 낳은 지옥문을 더 크게 열어젖히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사고가 나든 말든, 구조를 하든 말든 보험 상품만 많아지면 되나”며 울분을 토한다. 노동계급 자녀들 구조에는 관심도 없던 정부가 기업주들 구조에는 전력을 다한다.

이런 방향 전환을 위해 박근혜는 경

찰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도 더 억압하려 한다. 박근혜는 지난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한 강신용을 새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그는 8월 25일 취임식에서 “도로 점거 [같은] … 불법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선순위

결국 세월호 참사 넉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윤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 사람들의 목숨과 안전은 전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며 지금의 아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최대한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경제 살리기’ 기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을 겨냥한 압박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것도 자유주의·개혁주의 정치세력들의 장외투쟁을 겨냥한 압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도 사법제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권 요구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반대 논리는 정권의 보위가

걱정된다는 말과 한가지다.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해서 문제라는 비난도 옳지 않다. 오히려 구조 방기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하고, 조사 대상이 돼야 할 박근혜의 총복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부패한 통치자들의 부패와 무책임을 조금이라도 파헤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가 꼭 필요하다.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해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한다. 실제로 내 일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이런 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의 원인이 이윤 경쟁에 있는 만

큼 파업이라는 수단이 사용돼야 효과적이다. 파업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격해야 지배계급에게 최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내 일처럼 분노한 상황에서 하루 총파업 정도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급속노조의 28일 상경 파업 대오 다수가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로 오지 않고 귀향한 것은 아쉽다. 파업과 세월호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다. 특히 그날 주력 대오였던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 집행부들의 협소한 경제주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러는가.

이제껏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체 대신 자신들이 유가족 요구를 대리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는 유가족 뒤통수를 두 번이나 후려갈긴 야합이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박영선은 자신을 찾아온 대책회의 인사들에게 '이것이 최선'이라며 호통



거짓 위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가족들을 기만했다.

까지 쳤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대책위에게 '비민주적'이라는 막말

도 했다. 두 차례 야합이 재보선 직후여서 유가족들은 "선거에 유가족이

용하고 선거 끝나니 내쳤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야 협상 쟁점으로 꺼내 놓은 적도 없다는 사실이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다. 새정치의 약속은 사실상의 기만이었다.

바로 이런 불신 때문에 유가족들이 새정치연합을 못 믿겠으니 직접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김영오 씨는 온몸의 근육이 없어져 가는데도 단식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여권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마저 유가족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 하자, 총회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에 부여'하는 원래 요구를 다수결로(1백76 가족 투표 중 1백32 가족 지지)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장외투쟁 한다고 나와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팻말 시위를 했다. 유가족이 동의할 수 없는 협상을 해놓고 그런 시위를 하다니 우습다.

결국,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새정치연합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 구조적 정경유착 부패 사슬의 (부차적이긴 해도) 일부라는 간접 증거다.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은 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이라는 암호명에 꼼짝 못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에 의존하는 대책회의의 일부 온건 리더들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안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이런 새정치연합을 추수하면서 운동의 원칙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책회의 내 주요 NGO 등 일부 온건 리더들은 박영선이 처음 야합했을 때 항의차 그를 면담하러 가서는 특검 추천권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인 것처럼 전달했다.

이는 완전히 비민주적인 행위였다.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었고 대책회의 내에서 토론한 적도, 결정한 바

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대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특검 추천권 수준에서 멈추자고 유가족 일부를 설득하려고 했다.

비민주적

자칫하면 대책회의가 새정치연합의 야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운동을 분열시킬 뻔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다행히 김영오 씨의 단식을 비롯한 유가족들의 원칙적인 목소리

가 그런 무원칙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들춰내는 것은, 부패한 통치자들과 그들이 그 수혜자인 사회 시스템의 치부를 파헤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고 국회 다수인데다 새정치연합이 2중대 구실을 하는 상황에서 입법 청원 로비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법이 제정돼도 저들은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온건 개혁주의 리더들은 사태를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이들은 유가족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불가능하다고 내심 생각한다. 지금도 유가족들이 원칙을 고수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 단식과 항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대책회의의 일부 리더들은 유가족 총회에서 결정한 진상 규명 특별

법 위반 재확인을 "당일 총회가 안건 설명도 없이 표결에 붙이는 바람에 나온 결과"라며 유가족들이 법안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지독한 엘리트주의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쟁취하려면 여야 협상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조직 노동운동이 계급투쟁적 방식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원칙과 대의명분에 따라 참된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카페리를 타고 떠나는 수학여행은 남다르다. 항공으로 출발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추억·낭만·감동을 선사하면서 여유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해운업체의 광고 문구 같은 이 말은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나오는 것이다.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는 교육당국의 노골적 권고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1년 9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제주해양관리단이 보낸 협조 공문에 호응해, 교육청들은 "바다에 대한 친근함과 해양에 도전하는 개척 정신[을] 함양"하고 "저렴하고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여객선 이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제주갯길 이용 수학여행 안내'라는 이름으로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

해운업체들의 안전 관리 소홀을 모르지 않았을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와 저가 항공사 등장 등으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 처분해야 할 선박의 생명을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 지음,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212쪽, 12,000원

늘려 줘 위험을 더 키웠다. 여기에 교육청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수요까지 창출해 준 것이다.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에

야 일단 정지됐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는 세월호 정국을 끝내려는 시도 속에서 이 법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석훈의 책 《내릴 수 없는 배》는 유명선 같은 세월호가 어떻게 버젓이 운항될 수 있었는지를 들춰낸다. 저자는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가며 규제 완화, 민영화, 비정규직의 폐해 등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해운업체의 완전 공영제를 제안한다. 완전공영제를 하면 안전 규제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논리까지 파고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너무 단순하게 '국가'에 의존한다. 국가도 참사의 원인인 자본주의 이윤 경쟁 시스템의 일부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선박을 운영한다고 해도 가능한 수준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청와대가 책임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책임

물론, 국가가 직접 나서 재난 구조 과정을 책임지는 게 더 나은 면이 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실, 박근혜가 위기 관리 책임을 직접 맡으려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다.

그런데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의 회고록 《칼날 위의 평화》를 보면, 노무현이 위기 관리를 NSC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이 형식적으로는 만들어졌지만,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된 적은 별로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 보호와 이윤 중심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작동되기 때문이

다. 국가의 계급적 본질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난다. 계속 밝혀지는 사실을 보면, 국가가 희생자들을 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듯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재난 대응에 일관되게 나설 의지와 능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자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우파 정부의 집권과 연결시키는 것도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우파가 아니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규제 완화, 민영화, 비정규직을 확대했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들을 제 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정치적 약점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한국식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온건한 주장을 하지만, 《내릴 수 없는 배》는 세월호 참사 과정의 구체적 폭로를 궁극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다.

강철구

마리카나 학살 2년

남아공의 새로운 노동운동

차승일

8월 16일은 남아공에서 마리카나 학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마리카나 학살은 2012년 8월 16일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던 마리카나 광원들이 경찰의 (고의적) 발포로 34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이 학살은 이른바 '흑인의 민주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었다. 또한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 개혁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혹독한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단호히 파업을 유지해 임금 인상 22퍼센트를 쟁취했다. 이 투쟁과 승리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투쟁할 용기와 영감을 줬다.

현재 남아공에서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세적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시작은 마리카나 광원들의 투쟁과 승리였다.



아파트헤이트 해체 이후 최대 변화를 겪고 있는 남아공 2012년 9월 파업에 참가한 남아공 운수 노동자들.

마리카나 광원 파업의 배경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1994년, 여러 해에 걸친 위대한 투쟁으로 지독한 인종차별 체제(아파트헤이트)가 무너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정부가 들어섰다. 큰 변화였다.

그러나 불평등은 여전히 있었고 보통 흑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1995~2005년의 10년 동안 백인 가계의 소득은 40.5퍼센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흑인 가계의 소득은 오히려 1.8퍼센트 줄었다. 백인들의 소득은 흑인들의 소득보다 12배나 높다. 고용도 불평등하다. 남아공의 전체 실업률은 25퍼센트인데, 흑인의 실업률은 29퍼센트이고 백인의 실업률은 5.9퍼센트이다.

빈곤도 심각하다. 남아공 인구 15퍼센트인 1백90만 명이 판자 집에서 산다. 48퍼센트는 한 달 소득이 3백22랜드(약 30만 원)

밖에 안 된다.

아파트헤이트 반대 투쟁은 노동계급을 해방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흑인 중간계급의 일부는 수혜를 입었다. 그들은 ANC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을 불하받는 등의 방식으로 신흥 자본가가 될 수 있었다.

대표 사례가 시릴 라마포사다. 그는 1980년대에는 전투적 노조 지도자였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3위 광산업체 론민의 비상임 이사이자 주요 주주다. 마리카나 학살이 일어난 그 광산의 소유주가 론민이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을 배경으로 남아공에서는 시위가 연평균 7천 건이 일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파업도 급증했다. 2012년 마리카나 광원들의 파업은 그 일부였다.

호황 산업의 새 세대 노동자들

백금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에 쓰이는 중요한 원료로 2000년대에 수요가 급증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동력이었다. 덕분에 백금 산업은 200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관련 업체들은 이윤을 막대하게 벌어들였다.

백금 산업은 노동력 인구를 빨아들여 새 노동인구 부분을 형성했다. 2012년 파업을 이끈 노동자들은 2000년 이후에 노동자가 된 젊은이들이었다. 호황 산업에서 일하는 이 젊은 노동자들은 자신감이 높았다.

또한 이 새 세대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남아공 정치를 쥐락펴락한 삼각동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았다. 삼각동맹은 ANC, 남아공 최대 노총인 남아공노동조합연합 코사투, 남아공 공산당 SACP의 동맹 관계를 말한다.

2007~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백금 가격이 떨어지자 사용자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줄이는 등 노동자를 공격했다. 마리카나 광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에 나섰다.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하다

백금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었지만 백금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은 여전히 컸다. 사용자들이 양보할 여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마리카나 광원들의 승리가 쉽게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광원들은 정부와 사측의 공격에도 맞서야 했지만,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도 맞서야 했다.

당시 광산업의 다수 노조였던 전국광원노조 NUM의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노동자는 작업에 복귀해야 하고, 법 집행 기관들은 폭력과 살인의 주범들(파업 참가자들을 가리킴)을 강경 단속해야 한다.” 이 말이 있는 직후 학살이 일어났다. 사망자 34명 중 11명이 NUM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NUM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NUM 지도자들은 1994년 이래 구축된 노사정 교섭 구조의 틀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산업별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교섭하고 정부가 포함되는 구조였다. 상층에서 합의된 것은 해당 산업 전체에 적용됐다.

NUM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멀어지고 사용자와 더 가까워졌다. 상층 간부들뿐 아니라 현장과 더 가까운 직장위원회 그랬다. 직장위원들의 임금은 현장조합원 임금의 3배다.

NUM은 기존 교섭 구조의 틀 바깥에

서 일어난 마리카나 광원들의 파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NUM은 코사투 내 최대 노조였다. 그래서 코사투 지도자들도, 코사투와 동맹 관계에 있는 공산당도 광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배신에는 삼각동맹의 스탈린주의 혁명단계론의 영향도 있었다. 즉, 신식민지인 남아공에서는 민족적 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완수해야지,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자력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남아공 현실에서는 개혁주의로 나타났다

고, 흑인 노동계급의 이익을 흑인 중간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냈다.

광산업의 다수 노조였던 NUM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리카나 광원들의 투쟁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비공인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투지를 꺾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단호함은 연대를 이끌어냈다. 론민 본사가 있는 영국 런던에서도 마리카나 광원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마리카나 광원들은 학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승리했다.

노동자들을 결속시킨 현장조합원 네트워크

마리카나 광원들의 파업 과정에서 이후 여러 파업들에서도 나타나 는 조직이 하나 등장했다. 그것은 ‘위원회’라고 불린 현장조합원 네트워크였다. 위원회는 각 작업장의 파업 대표들이 모인 기구다.

처음에 광원 노동자들은 같은 광산에서 일하면서도 강도가 다르면서 서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다른 강도, 다른 광산, 심지어 다른 업체의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

하고 의논할 수 있었다.

요하네스버그 거주자이자 남아공 노동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국제 사회주의자 피터 알렉산더는 이 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파업이 영원히 가지는 않으므로 이 조직은 일시적 조직이지만, 파업이 가라앉더라도 이후 투사들의 네트워크로 발전해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아공 노동운동과 정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다

마리카나 광원들의 승리에 영감을 받아 다른 광산업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운수·화물 같은 다른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22퍼센트에 만족하지 않고 월급을 1만 2천5백 랜드(약 1백20만 원)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는 곧 ‘생활임금’ 보장 요구로 일반화됐다. 1만 2천5백 랜드는 일부 노동자에게는 현재 임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공세적인 요구

다. 올해 다섯 달 파업해서 승리한 백금 광산 노동자들의 요구도 이것이었다.

공세적 운동이 이어지며 남아공 노동운동의 구도도 변했다. 광산업의 최대 노조였던 NUM의 조합원이 반토막 났다. 그 대신 마리카나 광원 파업을 지지했던 광원건설노조 AMCU가 급성장해 광산업의 다수 노조가 됐다.

이런 흐름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20년 을 득세해 온 ANC-코사투-공산당의 삼각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코사투 내 최대

노조가 된 금속노조 NUMSA가 ANC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새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NUMSA는 조합원이 34만 명인 대형 노조로 영향력이 크다.

한편, 경제자유투사당 EFF라는 좌파 정당도 성장하고 있다. EFF는 창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신생 정당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총선에 출마해 1백만 표 넘게 득표하고 국회의원 25명을 확보했다.

이렇듯 마리카나 광원들의 투쟁과 승리는 남아공 정치의 새 국면을 열었다.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뒤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김준호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무단횡단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됐다.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은 무장하지 않은 브라운에게 총을 여섯 발이나 쏘고, 그중 두 발은 머리를 겨냥했다. “손을 들었으니 쓰지 말라”는 외침은 브라운의 유언이 됐다. 브라운의 시신은 네 시간 동안 거리에 방치돼 있었다.

브라운의 시신을 확인한 사람들은 곧 추모 행진을 시작했다. 브라운의 유언을 구호로 외쳤다.

항의 운동으로 번질까 봐 걱정된 경찰은 추모 행진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자동 화기로 중무장한 경찰들이 장갑차를 타고 다니며 최루탄을 쏘다.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흑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5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터무니없이 과장했다. “(가해 경찰의) 안전을” 위한다며 가해자 윌슨의 신원은 사건 발생 1주일 넘게 비밀에 부쳤으면서 말이다. 동시에 경찰은 브라운이 절도 행위를 하는 듯 보이게 찍힌 CCTV 영상까지 공개해 살해를 정당화하려 했다.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추모 행진은 곧 항의 시위로 바뀌었다. 매일 집회가 열렸다.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주지사 제이 닉슨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1992년 LA 소요 이후 22년 만의 일이었다.

CCTV 영상

미국 전역의 90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브라운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퍼거슨에서 멀리 떨어진 세인트루이스에서는 5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흑인뿐 아니라 백인과 다른 유색인도 동참했다. 시민 평등권 운동에 참가했던 인권운동가들부터 ‘점거하라’ 운동의 투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세했다. 전국 어디서나 시위대는 흑인 운동의 전통적 구호인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를 외쳤다.

노동자들도 연대에 나섰다. 패스트푸드·월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식품·상업노동조합 UFCW는 투쟁 기금을 모금하고, 연대 집회를 조직하고, 버스를 대절해 퍼거슨으로 달려갔다.

확산되는 항의 운동에 밀린 주지사 닉슨은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도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 폭력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8월 18일 마이클 브라운 살해 항의 행진. 마이클 브라운이 손을 들었음에도 경찰이 쏜 것에 항의하려고 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금도 심각한 흑인 인종차별

1980년대 경제 불황으로 세인트루이스 도심이 빈민가로 몰락하자, 흑인 노동계급은 “안전한” 삶을 찾아, 백인 노동계급이 버리고 떠난 교외 지역으로 이주했다. 퍼거슨 시도 그런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흑인들은 “안전”해질 수 없었다. 2013년 퍼거슨 거주 흑인들의 86퍼센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심 검문을 받았고, 92퍼센트가 차량 수색을 당했다. 2013년 체포된 사람들의 93퍼센트가 흑인이었다.

흑인들은 여전히 더 가난하다. 퍼거슨 거주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다. 빈곤율도 22퍼센트로, 인근 백인 거주 도시의 빈곤율의 다섯 배 이상이다. 평균 수명도 흑인이 백인보다 15년이나 짧다.

퍼거슨만 그런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전역에서 흑인 노동계급의 처지는 훨씬 악화됐다. 미국 흑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이고, 흑인 청년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여

섯 배이다. 흑인 아동 셋 중 하나가 빈곤층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28시간에 한 명 꼴로 백인 경찰, 사설 경비대, 민병대에게 살해당한다. 흑인 청년들은 대학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더 높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노동계급을 혹독하게 공격했다.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대를 투입하고, 파업 참가자를 모두 해고했다. 임금 인상은 극도로 억제됐고 연방정부의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던 흑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레이건 정부는 차별 금지 조치들을 무력화시키고 흑인 단체들을 공격했다. 그 결과 1980년 20만 명이 채 안 되던 흑인 수감자 수는 레이건 정부 8년을 거치며 1백20만 명을 넘어섰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흑인 하원의원은 3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보통 흑인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번의 흑인 반란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1991년 미국은 걸프전에서 승리했다. 같은 해 가을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1990년 여름부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노동계급의 삶은 급격히 불안해졌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LA에서 경찰 네 명이 흑인 로드니 킹의 차를 세우고 그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행인들이 경찰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폭로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로드니 킹은 강도죄를 뒤집어쓰고 2년형을 받은 반면, 가해 경찰들은 1992년 4월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흑인들은 그날 밤부터 닷새 동안 소요를 일으켰다.

흑인들은 분노와 박탈감을 약탈과 방화로 표현했다. 평소 흑인에게 가혹했던 경찰과 상점들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수치스럽게도 한국인 상점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류 언론은 ‘난폭한 흑인들의 폭력’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사태의 계급적 성격은 분명했다. 이 소요 사태는 인종 간의 대립이 아니었다. 시장 톱 브래들리, 경찰총장 윌리엄스, 합참의장 콜린 파월 등 진압 명령을 내린 자들은 모두 흑인이었다.

또한 직장·경찰서·감옥에서 흑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라틴계 빈민들과 백인들도 반란에 가담했다. 초기에 체포된 5천 명 중 흑인은 38퍼센트밖에 안 됐다.

수십 개 도시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흑인과 백인들은 로드니 킹의 석방을 촉구하며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를 함께 외쳤다.

결국 50여 명이 죽고 1천7백여

명이 부상당한 끝에 군대가 소요를 진압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미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급의 처지가 1992년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

걸프전 승리로 승승장구하던 부시는 타협적 제스처를 취하다 공화당 내 우파들의 못매를 맞고 자멸했다.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은 주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와 부유층 세금 인상을 약속한 덕에 당선할 수 있었다. 12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물론 클린턴은 바로 배신했다. 공공부문 투자 예산을 감축했다. 법인세를 인하고 복지 수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43억 달러를 들여 경찰특공대의 무장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LA 소요가 보여 준 분노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았다.

흑인 해방 운동의 혁명적 전통 흑표범당

흑표범당은 1960년대 미국 국가에 맞서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혁명적 도전이었다. 흑표범당은 1966년 오클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휴이 P 뉴턴과 바비 실은 흑인 해방을 위한 열 가지 강령을 바탕으로 흑표범당을 창립했다.

흑표범당은 “경찰 감시” 활동으로 유명해졌다. 무장한 당원들이 법전을 들고 흑인 거주 구역을 순찰하는 경찰차를 따라다니며 흑인들이 검문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감시했다.

경찰 감시 활동은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흑인 여러 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런 활동으로 흑표범당은 국가에 만만찮게 대항했다. 1968년이 되면 흑표범당은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FBI의 최우선 감시 대상이 됐다.

미국 국가는 흑표범당 당원들을 체포하고 괴롭히고 살해하기 시작했다.

흑표범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공격을 받았다.

흑표범당은 시민 평등권 운동의 급진적 경향을 나타냈다. 흑표범당은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SNCC와 가까웠고 잠깐 동안 조직을 합치기도 했다.

흑표범당은 가난한 흑인들에게 복

흑인·백인 노동자가 함께 체제에 맞선 역사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흑인과 백인이 단결해 투쟁한 역사도 있다.

산업화 초창기부터 미국 지배계급은 인종·출신 국적에 따라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했다. 흑인들이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노예로 살던 19세기 초 미국 지배자들은 ‘토박이 백인’과 이민자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흑인들을 저임금 대체인력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남북전쟁을 거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저임금·고물가에 시달리고 전쟁에 끌려가야 하는 처지는 흑인과 백인을 가리지 않았다.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 등이 주도한 여러 운동에서 흑인과 백인은 단결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 탄생한 미국 노동계급은 그 뒤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파업을 일으켰다. 이 때 조직된 미국 최초의 전국적 노동자 단체 ‘노동기사단’은 인종과 출신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 노동자 연대를 호소했다. 노동기사단은 대규모 파업으로 당시의 악덕 자본가였던 제이 굴드에 맞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영결스는 이를 두고 “미국 노동계급 전체(를) … 결속시키고 적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신들의 힘을 절감케 한 전국적 연대”라고 격찬했다.

19세기 말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기사단은 탄압받고 분열해 쇠락했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전반의 처지를 공격하는 한편, 흑인과 백인 사이를 체계적으로 이간질했다.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적 제도를 도입하고 인종 간 적대를 부추겨 노동계급의 단결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단결의 전통은 20세기에 이어졌다. ‘뺑과 장미’라는 구호로 유명한 191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는 함께 싸웠다. 이 파업들을 주도한 세계산업노동자연맹 IWW의 조직자들은 흑인과 백인이 단결했던 19세기 운동의 경험을 새 세대 노동자에게 전수했다.

아메리칸 드림

1929년 미국 발 대공황은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를 산산조각 냈다. 이 때도 첫 희생자는 흑인들이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 인종차별 정서가 만연해졌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노동계급 투쟁이었다. 1934년 트로츠키주의자들, 공산당원들, 급진적 활동가들이 주도



흑인·백인 섬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함께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1934년).

한 세 건의 파업 승리는 커다란 계급 투쟁의 분출을 낳았다. 1백80만 명이 참가한 전투적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들은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에 타격을 줬고, 미국 자본주의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줬다. 50만 명에 이르는 흑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흑인과 백인이 단결한 노동자 투쟁은 인종차별로 악명 높던 남부 광산에서 흑인·백인 간 임금 격차를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로즈벨트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노동자 투쟁을 억눌렀다. 심지어 흑인·백인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비공인 파업을 벌인 활동가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이며 노동운동 안에서 지지를 잃어갔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뒤 반공주의 탄압이 미국 노동운동을 강타하며 노동계급 투사들이 해고되거나 수감됐다. 꽤 많은 수가 파업 운동에서 성장한 흑인이었다.

이후 미국 노동운동은 전후 황금기에 새롭게 성장한 흑인 노동계급을 조직하지도, 1960년대에 일어난 위대한 흑인 저항과 만나지도 못했다. 흑인 민족주의가 흑인과 백인의 단결을 대신했다.

그럼에도 미국 노동계급은 인종을 뛰어넘는 노동자 연대로 인종차별에 맞설 때 중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을 거듭 보여 줬다.

분노가 미국을 뒤흔들려면

2008년 경제 위기가 미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가혹한 빈곤과 실업, 차별과 천대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는 더한층 커졌다.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라는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오바마 정부 하에도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경찰이 근거 없이 흑인을 의심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흑인 살해는 계속됐다. 이에 맞서 지난 몇 년 동안 수십만 명 규모의 대중 시위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브라운의 사망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저항은 이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흐름 속에서 확대됐고, 여러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노동조합 UFCW의 연대가 주목할 만하다. UFCW는 경제 불황 때문에 직장을 잃고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는 유색인 노동자들을 조직해, 2012년 월마트 노동자 파업과 2013년 패스트푸드 노동자 파업을 주도했다. UFCW는 많은 미국 노동계급의 이익과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 투쟁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UFCW는 조합원이 1백30만 명으로 늘어나 미국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 전체 조합원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대형 노조로 성장했다.

적 폭력을 주장했다. 흑표범당은 정치 이론을 경계했고, 말만 많고 실천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좌파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흑표범당은 당시 성장하고 있던 흑인 운동이 체제에 도전하기보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흑표범당원 린다 해리슨은 이렇게 말했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정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화와 환상에 집중한다.”

켄 올렌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373호 / 번역 김준효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이정원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충, 군,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유럽인과 아프리카 흑인과 동아시아인”이 한 집단이고, “몽골인과 호주 원주민이 또 다른 집단”이고, “코이산족(아프리카 남서부에 사는 소수 민족)과 일부 중부 유럽인”이 한 집

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전적 형질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인종 내부의 유전적 변이가 인종들 간의 유전적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생물학자도, 유전학자도 신체적·유전적 차이를 기준으로 인간 집단을 일관성 있게 구분하지 못했다.

한편, 인종차별은 흔히 피부색과 관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에서 인종차별의 표적이 된 아일랜드인이나 유럽 등지에서 박해받은 유대인은 피부색을 이유로 천대받은 것이 아니었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며 거론되는 인종적 차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산물

인종차별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는 없던 현상이다. 물론 일부 집단에 대한 배척과 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무슬림·이교도가 천대받았다. 이는 종교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은 없었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의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발전하는 여명기에 생겨났다. 직접적으로는 17~18세기 대서양 노예무역의 출현에서 비롯됐다. 노예무역은 자본가들이 산업화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노예로부터 추출한 이윤의 상당 부분은

운하·철도·선박 같은 산업 생산에 투자됐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자본의 시조 축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모순되게도 미국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고,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흑인이 다른 인간과 평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

이 과정을 두고 에릭 윌리엄스는 《자본주의와 노예 제도》(김성균 옮김, 우물이있는집, 2014)에서 “흑인 노예제도를 탄생시킨 것은 경제 논리였지, 인종 논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즉, 인종차별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인종차별이 노리는 것

이렇게 생겨나고 굳어진 인종차별은 자본가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분열이라는 이익도 가져다 줬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영국 노동계급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자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로서, 영국 노동자가 아일랜드 노동자를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로 여기며 “증오”하고 “자신을 지배 민족의 일원으로” 느끼는 데서 말미암은 양 노동자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지목했다.

마르크스의 이런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특히 각국의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겪는 천대와 박해와 관련해 그렇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경제적 이득(노동력인구 공급의 유연성, 저임금, 고된 노동)을 얻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를 일자리와 복지의 도둑으로 몰고, 임금과 고용 사정 악화의 책임을 전가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들이 부추긴

이주민 배척 정서가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는 훌륭한 토양이 돼 왔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피부색 같은 생물학적 우열보다는, ‘인종 간 우월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거나 ‘문화(또는 문명)의 불평등은 존재한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무슬림 혐오가 대표적이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 노예제도나 홀러코스트를 정당화하는 극단적 인종차별이 광범한 대중에게 배척받아 설 자리가 현저히 줄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생물학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는 종종 결합돼 왔고, 근거가 무엇이든 특정 집단에 대한 천대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궁극으로 인종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뿌리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도 도전해야 한다.



59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선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8월 28일 부산대병원 파업 집회.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장호종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
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
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
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공급자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로 삶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70퍼센트대에 이른다. 7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이 서명에 참여했다. 의료 민영화 입법예고 의견서가 복지부 역사상 가장 많은 10만 건이 접수됐다.

“병원에서도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하나?”, “기업들이 우리를 ‘환자’로 볼까?”, “부자들만 국민인가?”, “영리 병원은 아니어도 그 초석을 놓는 건 확실해 보인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어차피 국민의 소리는 듣

지도 않겠지” 하는 환멸 섞인 의견도 많았다.

이런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조치가 포함됐다.

국회 입법소사처조차 다수 의견으로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산학협력법 '유권 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존 법률까지 무시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조차 거추장스러워 할 정도로 비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의사에게 영리 자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이 더욱 돈벌이에 매달리도록 부추길 것이다.

의료 편의와 연구를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환자의 질병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길도 터 주고 있다. 이미 서울대 헬스케넥트가 SK측에 환자 질병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임상시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자들을 실험용 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도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다. 이런 시험으로 얻는 특허는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병원 내에 호텔(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다인실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1인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병실이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회사가 여러 병원에 메디텔을 설치하면 체인형 병원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

영리병원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도 허가하려 한다. 중국계 싼얼병원은 얼마 전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에 갖추지 못해 심사에서 보류된 바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싼얼병원의 모회**
사인 **CSC헬스케어의 회장**은 사기대
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싼얼병원의**
최대주주사 두 곳은 지난해 부도가 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9월 안에 싼얼병원 설립을 승인하려 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 병원 노동자들은 8월 말 3차 파업을 벌였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1백여 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은 이런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여론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박근혜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더 광범한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은 11월 1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각종 홍보 활동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8월 28~29일, 59년 만에 첫 파업을 성사시켰다.

또한 감격스럽게도 이날 파업 집회에서는 전국 스무 곳 이상의 보건의료노조 지부들과 의료연대본부 분회들이 부산대병원에 모여 부산대병원 '정상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근혜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빛이 많으니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도 '방만경영 사업장'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를 삭감시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오민석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기재부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부산대병원을 방만 경영 사업장으로 선정해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후퇴시키려 한다. 정부가 엉터리 잣대를 대면서 방만하다며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철밥통인 양’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방만하다는데, 우리의 임금은 10개 국립대병원 중 8위에 머문다” 하고 비판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또한 수백조 원의 공공기관 부채는 결코 노동자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처럼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생겼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도 “정부가 공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병원 노동자들이 방만하다고 한다. 고위 관료들은 2억~3억 원씩 받아먹으면서 말이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습은 왜 노동자가 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병원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두 고통에 빠뜨리
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건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깎는 것은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있
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 사고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부산대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오민석 지부장은 “이 투쟁을 피할 마음이 없다. 59년 만에 파업을 성사시켰다. 끝까지 투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자” 하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모두 공공기관 정상화를 취소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폐기하고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박준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이 글은 의료민영화저지 서울대책위 강연회에서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한 강연을 축약한 것이다.

지난해 오병희 병원장이 들어서면서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07년 54억 원 적자, 2008년에는 1백88억 원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얘기대로라면 2007년 이후에 흑자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흑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병원이 있을까요? 넘치는 외래환자 때문에 '1분 진료'가 행해지고, 입원실이 부족하고, 어떤 수술들은 수개월 후에도 스케줄을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는 건 이렇습니다.

병원은 수익을 숨기는 방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름의 저금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금은 비용으로 처리돼요. 1백억 원을 벌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2백억 원을 넣으면 올해는 적자 1백억 원이 되는 거죠.

우리 노동조합이 2007년 이후 5년간의 경영 결과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랑 정부에서 지원받는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다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5년 내내 적자라는 병원의 발표와는 달리, 2008년도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장은 비상경영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진료 재료 같은 것도 아껴 쓰라고 했어요. 너무 비싼 거 쓰니까 싸게 걸로 바꾸자. 또 병원에서 수가로 매겨지지 않던 물품, 즉 환자들 돈을 내지 않던 물품을 수가가 매겨지는, 그리고 원가도 더 비싼 물품으로 바꾸라고 하죠. 바뀐 주사기는 항암제가 새고, 기도에 넣는 카테터도 불량품이 생겼어요.

그 결과, 의료수익이 크게 늘었어요. 예산 절감은 저가 재료를 사용해서 줄인 것이고, 절감액의 반 정도는 인건비래요.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일도 발생했어요. 불과 몇 개월 동안 1백60여억 원의 효과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병원에서 진료부서의 의료수익을 마음먹고 늘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과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예요. 병원은 외래 진료공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얘기가 맞다고 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지하 6층짜리 건물이면, 1층에 외래 진료 시설을 넣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하 1층에는 외래가 없어요. 대신 기념품점, 대형 마트, 식당, 안경점, 미용실 이런 것이 1층에 들어올 계획이래요.

마침 정부도 부대사업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고, 병원이 자회사도 만들 수 있고, 자회사로 음료 개발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죠? 자회사를 해서



의료 민영화의 선두 주자 서울대병원에 맞서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장사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대사업장이 포함된 건물을 지하 6층까지 파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9백40억 원 드는데 정부에서 2백30억 원을 대주고, 6백60억 원은 BTL로 하겠다고 했어요. 민자투자를 받겠다는 거죠. 두산건설 사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계약이 거의 다 체결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민간투자를 받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되요.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총 1천80억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첨단 외래센터가 바로 방만경영이예요.

첨단외래센터

지금이라도 접지고 얘기했더니 병원장은 이미 2009년에 결정된 거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돈 문제만 따져 봐도, 2009년도에 사업 결정을 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3백18억 원 흑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2010년도에도 4백85억 흑자였죠.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돈 걱정은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규모 확장 공사는 부실화의 시작이죠. 직원들은 '서울대병원의 4대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돈 욕심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부대사업 확장과 자회사 허용에 발 맞춰서 제일 먼저 실험장이 되는 게 바로 서울대병원입니다.

'헬스케어'는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 의료원의 '연연케어'와 함께 영리 자회사의 예로 들어졌어요. 의료법인이 아닌 대형 병원들만 자회사 할 수 있고 작은 병원은 자회사 못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영리 자

회사를 의료법인에도 허용해 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세대 의료원에서 만든 연연케어는 진영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의 헬스케어만 남았죠. 헬스케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커넥트입니다. 재벌과 서울대병원의 커넥트.

헬스케어는 뭐하는 회사냐면 서울대병원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원격의료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원격의료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사업은 못 해요. 고작 하는 게 '헬스원'이라는 건데,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만보기 같은 역할을 해요. 몇 걸음 걸었으니까 "잘했습니다".

2백억 원을 투자해서 고작 이걸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직전이에요.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헬스케어가 하고 있는 게 의료 행위 비슷한 응용처방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병원이 문제제기 하면 복지부는 시정 명령과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고, 과징금 부과하면 서울대병원에 막대한 손실이다. 심지어 의료기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케어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SK가 투자자본을 더 많이 썼다고 했어요. 주식만 보면 서울대병원이 51퍼센트 가지고 있지만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SK텔레콤이 더 많이 샀다는 거죠.



서진애

헬스케어가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돈벌이 때문만은 아니예요. 우리는 서울대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여기로 나갔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헬스케어의 지분 1백억 원어치를 받으면서 현금을 내는 대신 전자의료기록(EMR)을 팔았습니.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전자의료기록인데 그 사용권을 14억 원을 받고 헬스케어에 넘겼습니다.

헬스케어

병원은 계속해서 시스템만 넘겼고 안에 내용물은 안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글 프로그램을 판다고 해서 한글로 작성한 문서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글 프로그램을 깔아 주는 거죠? 하지만 편집자작물이라는 것은 저작권 등록이 돼 있고 그 안에 수술명까지 들어 있어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8월 12일에 발표한 6차투자활성화대책을 보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건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어요. 연구가 뭐예요? 뭐든지 다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헬스케어 사장이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님이예요. 국가공무원법 찾아보니까 공무원은 아예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헬스케어 영리 자회사죠? 그런데 벤처기업활성화법에 공무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벤처기업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헬스케어는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연구목적으로 생긴 벤처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를 헬스케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하겠죠.

우리는 이런 걸 반대하는 파업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이 가장 강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싸움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적과의 싸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뉴스 보셨나요? 아랍에미리트에 서울대병원이 진출했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2백 명 정도의 직원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2백 명은 병원에서 각종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상당한 숙련도를 가진 직원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다.

노동조합한테 정규직으로 채우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채용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요. 이미 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대병원에 의료 공백이 생길 겁니다. 진료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에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김민식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 학교는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는 6·4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의 제1 공약이었다. 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압력과 반대 압력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다 부분 개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사실, 자사고 폐지는 중요하지만 비교적 작은 교육 개혁이기도 하다. 설령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중등교육의 불평등과 서열 체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듯이, 특목고(외고나 과학고 등)가 고교 서열 경쟁에서 최선두에 있고, 무엇보다 대학 서열 체제와 그에 따른 입시 경쟁이 중등교육을 무한경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작은 개혁에조차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사고 부분 취소는 역설적으로 자사고의 특권적 지위를 더 강화해 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자사고가 살아남아 특목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 부분 취소는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한 ‘일반고 전성시대’를 요원한 과제로 남겨둘 개연성이 다분하다.

물론 보수 진영은 이런 부분 개혁에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자사고 재단들과 학부모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사고는 시행 5년 만에 입시 명문고로 자리잡았다. 2013학년도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자를 보면 2~4위가 자사고들이었다. 교육부도 자사고를 옹호한다.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썰기를 박았다.

이런 보수적 반발은 진작에 예견된 바

이다. 무릇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자사고 폐지도 보수적 반발을 부를 것임은 자명했다. 그런데도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설득과 유인”을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물질적·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부드럽게’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적이다.

실망스럽게도, 조 교육감은 ‘부드러운’ 개혁을 선택한 듯하다. “설득과 유인”을 통해 자사고를 ‘교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 목표를 향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개혁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의 이런 동요와 일관성 결여는 개혁의 동력인 노동자 계급 지지자들을 실망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세력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7월 하순에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오히려 자사고 재단과 학부모들이 더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점거 농성

따라서 진정한 개혁은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 교육감과는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전개할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대위’(서울공대위)가 교육청에서 점거 농성하며 조 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필요했다. 서울공대위는 8월 19일부터 8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조희연발(發)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다리려는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점거 농성이 비록 자사고 전면 취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 진보 교육감이 동요하고 그 개혁이 불철저할 때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은 진보 교육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벌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진보 교육감은 “견제와 협력”의 대상일까?

조희연 교육감이 보여 준 동요와 한결같이 못함은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동요하고 오락가락하는 진보 교육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서울만의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 더 일반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에 교육 개혁을 이룰 수단과 방법의 문제이다.

가장 흔한 생각 중 하나는 전교조가 교육청 기구에 직접 참여해 보수적 관료들을 견제하고 진보적 교육 정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노동자 계급에 유리하게 교육을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교육청은 자본주의적 국가 기구이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청의 수장으로 있더라도 이런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청 안에서 진보적 교육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본래 목표는 그 반대

의 결과를 낳는다. 국가 관료들이 포진해 있는 교육청은 본질적으로 교육 개혁에 적대적이고, 개혁 운동가들은 그런 환경에 타협적이 돼야 한다는 압력을 상시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혁 운동가들이 교육청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 교육청을 바꾸기’는 전교조가 선택할 수단이 못 된다.

그보다는 국가 기구 밖에서 독립노조로서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을 봐도, 개혁 입법은 국가(와 의회) 밖 대중 투쟁의 압력이 있을 때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진보 교육감은 “견제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압박 대상이 돼야 한다.

즉, 진보 교육감이 지배계급과 우파의 반동적 공격을 받을 때는 방어를 하되, 진보 교육감과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시장경제정적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를 공격해 이 운동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노골적 자사고 지키기에도 진보 교육운동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은 명백히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많은 나라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는 이 결정 바로 다음 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고, 재판부는 영장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6월 27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조퇴 투쟁을 벌인 전교조.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 감정수당 도입, 점오계약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연 매출 7조 원으로 국내 유통업체 2위를 차지하는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노동자들은 “1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했다. 게다가 최근 경제 위기와 대형유통업체들 간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자,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다.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공일용 파트에서만 5명이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인력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관리자들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직원이 많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금천지부장)

사측은 노동자들에게만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주면서 임원 4명의 연봉은 무려 1백억 원이나 가져갔다.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각 매장에서 중간 관리자들의 무시와 욕설,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병가 등의 문제를 개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올해 4월 15년만에 처음으로 사측과 임금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측은 시급을 겨우 2백 원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겨우 1백20원 높다. 또, 감정수당 도입, 휴가 보장 같은 요구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1월 약속한 점오계약제의 단계적 폐지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09년에 제가 받은 시급이 4천6백50원이었어요. 지금 5천4백50원이에요.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백60원이 오른 셈인데, 지금 그 전보다 겨우 40원 정도를 얻어서 인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금천지부 조합원)

“홈플러스 사측은 교섭에서 시급 인상을 더 하면 다른 마트(대형유통업체)한테 욕 먹는다고 얘기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담합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수원지부장)

노동자들은 8월 29~31일 동안 처음으로 전국적인 전일 파업을 벌였다. 파업 첫날인 29일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노동자 5백여 명이 대한문에 모여, 집회를 하고 손수 만든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울산과 부산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와 행진을 했다.

또, 금천지점의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에 항의해 8월 25일부터 매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쟁의권이 있을 때, [현장의 문제를] 결함시켜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처음인데 지금까지 싸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노조 만들고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측이 여전히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져야 하나?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평촌지부 부지부장)

추석은 대형유통업체가 일 년 중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이런 시기에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준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새롭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선 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소은화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금융노조는 8월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9월 3일(수) 하루 파업을 앞두고 열린 27일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복지 삭감 등 사용자들의 도발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싸워야 할 이유는 많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복지비를 절반까지 깎으려 한다. 비용 삭감은 인력감축 우려도 낳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강제 합병 시도도 문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합의한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두 낙하산 인사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KB금융의 낙하산 경영진 퇴출 투쟁도 있다. 우리은행은 9월 민영화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대규모 인력감축을 한 씨티은행, SC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앞둔 산업은행에서도 고용 불안감이 크다.

산별 임단협도 진척이 없다. 사용자들은 공공기관 복지 축소가 관철되면 민간 금융기관



2만여 명이 모여 정부와 사측의 고통전가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8월 27일 금융노조 파업 결의대회.

들로 이를 확대하려고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2009년 신입 직원 임금(초임) 삭감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들인 임금인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정년 60세 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시간 축소 등에서 별 진전이 없다.

파업 날짜가 다가오자, 8월 26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 자체를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정부가 먼저 정책과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 중앙위원회는 독단적으로 복지축소를 합의한 대기업 세 곳의 지부장들을 산별 파업 성사를 위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노조에서 제명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해 경제위기 고통전이 드라이브에 경고를 받길 바란다.(다만, 외환지부가 교섭권 위임 문제로 산별 파업 합류가 어려워져 자체 총회를 할 계획인 것은 아쉽다.) 그러나 2, 3차 파업의 전망도 커져야 정부와 사측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김문성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현대·기아차지부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8월 22일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서울 본사 앞에서 계열사 파업 집회를 벌였다.

지금 사측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별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몽구는 기아차 등 계열사들에게도 “현대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안도 제출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있다. 현대차의 발을 묶어 전체 계열사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이중임금제 등 임

금체계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심야조를 하나 더 늘리는 3교대제도 제시했다. 본지가 두 호 전에 경고했던 3교대제를 통한 밤샘노동 부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지부는 통상임금 확대, 임금·근무체계 개악 반대 등의 요구를 확고히 움켜쥐고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현대차지부 한 간부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되, 성과금을 줄여 임금 총액은 맞추자’는 우려했던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이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를 자체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그룹은 사내유보금만 1백13조 9천억 원 넘게 쌓았을 만큼 지불여력이 충

분하다.

게다가 현대차에서 나쁜 선례가 생기면 계열사·부품사 등 많은 작업장들에 악영향도 줄 수 있다.

최근 현대차지부는 9월 2일까지의 집중 교섭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전면 파업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9월 3일 부분 파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현대·기아차지부는 파업을 더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8월 28일 집회에는 노조 간부들의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사측에게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

박설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를 못 받았습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도 월급에서 차감당했습니다.”

“LG 제품을 쓰는 고객님이 부르면 휴일에

도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LG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센터에 노조가 우후죽순 생기자, 사측은 일부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인터넷·IPTV·전화 개통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며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도급계약서를 강요한 것이다.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신속하게 친사측 복수노조를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일도 주지 않았다. 조합원을 해고한 곳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투지를 다지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절반이

넘은 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겼다.

더는 노조를 외면할 수 없게 된 사측은 얼마 전부터 교섭에서 단협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 제시안에는 조합원 자격 제한, 회사에 대한 비판 금지, 단체행동권 제한 등 법도 초월하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자들은 “쓰레기 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교섭이 결렬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9월 파업을 준비 중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당해 왔는데 이제 저들을 머리 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며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성지현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 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배치도 명시했다.

이는 지난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측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합의를 끌어냈다. 재판에선 각 공정별 조건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상당수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겼고, 노동자들에게 “소송 패소자는 모든 희망을 잃을 것”이라며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고 협박했다.

이 속에서 비정규직 지회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10년 넘게 함께 싸운 동료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고 두려움이 번져갔다. 결국 재판에서 불리한 전주·아산 지회는 교섭에 더 매달렸고, 울산 지회가 교섭에서 빠진 상황에서 합의를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투쟁이 난관에 부딪히고 점점 약화돼 온 과정의 반영이기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멀게는 2010년 점거파업 패배 이후, 가까이는 2012년 재개된 투쟁이 꺾인 뒤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용문 집행부의 등장과 2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투쟁의 기회가 생겼던 때였다. 그러나 사측의 공세와 정규직 지도부의 신규채용 압박과 후퇴 종용 속에 투쟁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

원하청 연대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을 받아안아 사측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사측의 신규채용 압박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했다. 이 속에서 원하청 연대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비정규직 지회들도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는 요구안을 후퇴시켰다. 2012년 8월에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로 후퇴했고, 이듬해 8~9월에는 그에 더해 신규채용 방식까지 수용했다. 올해 교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은 집단적 투쟁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규채용이라는 개별적 고육지책으로 이끌렸다.

요컨대, 아산·전주 지회의 신규채용안 합의는 사측의 공세, 정규직 지부의 압박, 비정규직 투쟁의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빚어진 절망과 고통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후퇴는 올바른 대처가 아니었다.

지금 울산 지회와, 아산의 일부 조합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를 비판하며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동지들의 발걸음에 건투를 빈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후퇴를 바로잡고 다시금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규직 활동가들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해야 한다.

지난 투쟁을 돌아보면, 타협을 종용하는 정규직 지부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한결같이 추진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구실을 하도록 하려면 조합원 대중의 사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시기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단단한 조직이 구축돼야 한다.

선진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지난 시기 투쟁의 교훈을 곱씹어 봐야 한다.

박설

※ 더 상세한 기사 전문은 온라인을 참고하십시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중동 변화의 열쇠다. 2013년 5월 시리아.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손 떼라

김종환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로까지 폭격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처음 이라크를 폭격할 때 미국이 내세운 명분인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제한된 공습’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인 기자 한 명이 ‘이슬람국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이 폭격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수형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미국은 ‘이슬람국가’가 기자 석방 조건으로 요구한 몸값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그 기자의 죽음을

을 방기했다.

미국이 개입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중동에서 자신이 구축한 지배력(주류 언론은 이를 ‘질서’라고 부른다)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의 패배와 2011년 아랍 혁명 발발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폭격은 중동 민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억누르고, 자신의 꼭두각시나 적어도 ‘말이 통하는’ 자들이 중동을 통치하길 바란다.

미국의 폭격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라크에서 친정부 민병대가 예배당에서

수니파 70여 명을 살해했다. 피해자들이 ‘이슬람국가’와 같은 수니파라는 이유였다. 애초 ‘이슬람국가’ 등장한 주요 배경 하나는 미국과 미국이 세운 친미 정부가 부추긴 종파 갈등이었는데, 미국의 개입이 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다양한 세력이 자국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고, 이들과 ‘이슬람국가’의 관계는 복잡하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은 미국이나 ‘이슬람국가’냐 하는 식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중동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진영 논리로는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그동안 스탈린주의자들(옛 공산당 계열)은 시리아를 반제국주의 국가로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려는 시리아 혁명을 “CIA의 음모” 따위로 폄하했다.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무수히 학살하는 것에 눈감으면서 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리아 정권이 미국에 협력해 온 사실에도 눈감았다.

최근 ‘이슬람국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시리아 정권은 미국과 공조하고 나섰다. 시리아 정권은 미국의 개입을 공개 환영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시리아 정권이 이미 미국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아 ‘이슬람국가’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관료들도 시리아 정권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시리아를 반제국주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던 스탈린주의자들의 논리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이런 관점으로는 제국주의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은 미국만을 제국주의로 보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며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세력을 모두 반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보는 낡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시리아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제국주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때로는 미국·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척하고 때로는 협력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볼 때 제국주

의는 특정한 강대국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자본들의 경제적 경쟁과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되는 가장 최근의 자본주의 체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에서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자 연대〉는 시리아 혁명을 처음부터 지지했다. 그리고 11개월 전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려 했을 때도 그것이 시리아 혁명에 휘방을 놓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반대했었다.

이렇듯 제국주의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지지할 때만, 시리아 정권이 미국과 협잡하는 것에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미국의 중동 개입을 반대할 수 있다.

학살자 이스라엘, 또다시 패배하다

김종환

이스라엘은 역대 최장 기간인 50일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들의 표결 요구도 무시하고 직권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이자 가자 지구의 선출된 집권 세력인 하마스가 더는 로켓포를 쏘지 못하도록 궤멸시키겠다고 했지만, 휴전이 공식 선포되기 직전 까지도 하마스의 로켓포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뿌리 뽑거나 무장해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마스가 군사적으로 이전보다 강해진 것을 확인했다. 2008~09년의 공격에 견줘 이번 에 교전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이 크게 늘어,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사실상 가자 지구 국경을 넘지 못했다.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제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된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었다.

가자 지구 공격으로 목표한 바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예상 밖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 총리의 지지율은 공습 초반 82퍼센트에서 휴전 직전 38퍼센트로 급락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가자 지구에 퍼부

었다. 이스라엘이 쏟아부은 폭탄은 폭약 양(TNT)으로 환산하면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더 많았다. 한국의 고양시만 하고 1백80만 명이 밀집해 거주하는 곳이다 말이다. ‘테러리스트(하마스를 지칭한다) 근거지 정밀 타격’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미국 외무장관 존 케리조차 “헛소리”라고 했다. (그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무심결에 그랬다.)

“헛소리”

이런 무자비한 공격으로 50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2천2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70~80퍼센트는 민간인이고 수백 명은 어린이였다.

이런 막대한 희생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지구 봉쇄를 풀라는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봉쇄는 ‘서서히 자행되는 학살’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가자 지구로 향하는 육로와 해로를 봉쇄해 기초 생필품의 반입조차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휴전 이후 유엔 식량기구가 공식 검문소를 통해 가자 지구에 식량을 반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봉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물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이스라엘은 2012년과 2008~09년에도 봉쇄 완화, 재건에 필요한 물품 반입 허용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거인 골리앗에 맞서는 소년 다윗’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은 군사작전은 이런 거짓을 발가벗기고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물론 미국, 반기문으로 대표되는 유엔, 한국을 비롯한 친미 국가의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을 돕거나 학살을 방조했지만 말이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자행한 50일 동안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이스라엘 공격에 항의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경우 과거 시위 규모를 뛰어넘었다. 미국 오클랜드 항구에서는 노동자와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나타내며 이스라엘 선박의 하역을 이를 동안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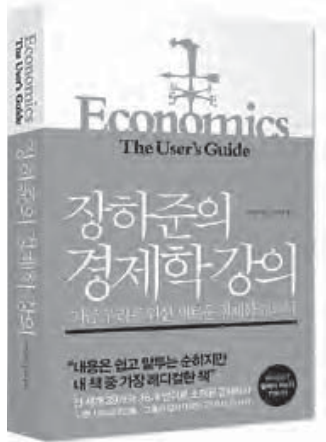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의 생존자와 그 후손 수백 명이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국제 유대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뉴욕 타임스〉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는 광고를 실은 것도 ‘유대인의 수호자’라는 이스라엘의 명분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노동자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집회·기자회견·행진을 여러 차례 열었다.

반면, 교육방송 EBS는 이 와중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 다큐 특별전’을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은 이 계획을 무산시키는 첫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국제 연대는 가자 지구 민중에게 큰 힘이 됐다. 이번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한 팔레스타인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휴전 합의]이 승리인 까닭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였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을 물러서게 만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기 때문이고, 인종차별적인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흉측한 진상을 우리가 들춰냈기 때문이고, 세계 도처에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의를 끝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지음, 김희철 옮김
496쪽, 부키, 16,800원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과,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제도학과, 케인스학과, 마르크스 학파, 신고전주의 학파, 슈페터 학파 등 9개 학파에 대해 소개한다.

2부 ‘경제학 사용하기’에서는 생산량, 행복, 생산, 금융, 불평등과 빈곤, 실업, 정부의 역할, 국제 무역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경제 이론들을 실제 경제에 적용하며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 준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유용성은 주류 경제학 비판에 있다. 장 교수 스스로 “내용은 쉽고 말투는 순하지만 내 책 중 가장 래디컬하다”고 평했는데, 이 책은 여러 경제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부추긴 주류 경제학의 사고 구조와 문제점을 파헤친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실패가 없고, 그나마 존재하는 사소한 결함은 현대 경제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파했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었다. …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경제학은 심각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자기 분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마당에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25쪽)

장 교수는 “이종교배”를 통해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보존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경제학의 유일한 주류 이론으로 군림해 온 신고전파 경제학을 9개 경제이론 중 1개로 소개한 것 자체가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장 교수는 경제 주체를 ‘이기적이고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는 신고전파에 반대한다.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초합리적이지 않으며, 이기적인 것만도 아니고, 사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직장 문 앞에서 끝난다”고도 장 교수는 비판하는데, 신고전파가 경제를 교환 관계로만 보며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생산에 무관심한 것을 질타한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입구에 쓰인 은밀한 생산의 장소”로 들어가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2부에서 제시하는 생산량, 빈곤, 실업, 노동시간 등의 관한 수치들은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유용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유용한 비판을 여럿 제시

해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취약한 가정 위에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책은 기대한 것만큼의 급진성이나 통렬함은 보여 주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신선함도 훨씬 덜할 것이다.

장 교수가 ‘경제학의 이종교배’를 주장하며 신고전파 경제학의 유용성을 인정한 점이 비판의 통렬함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다.

약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별도의 장으로 떼어 내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데서 두드러진다. 저자가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경제학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진 것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다”고 말한 바 있고,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이번 경제 위기가 각 경제 이론을 중요한 시험대에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위기 자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이 책의 큰 약점이다.

예를 들어, 장 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하면서 경쟁적 생산 체제인 자본주의가 그 모순 때문에 붕괴한다고 봤다고 간략히 요약하는 데 그칠 뿐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 케인스주의 부분에서는 투자의 부족에 따른 ‘과잉 저축’이 유효수요 부

족을 낳아 실업과 경제 위기를 낳는다는 점을 요약하지만, 이를 이번 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 교수는 금융을 다루면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주 이익 극대화’ 모델 때문에 기업들이 이윤을 배당으로 분배해 버려서 “기업들의 투자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는 투자의 부족이 과잉 저축과 금융 팽창을 낳는다는 케인스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정반대의 설명이다.

현실은 장 교수의 설명보다 마르크스주의가 더 잘 들어맞는다. 장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을 정도로 배당해 버렸다고 보지만, 실제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둔 채 투자를 회피해 왔다. 이윤율이 떨어져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다.

장 교수가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취약하고 무관심한 것은 그가 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개발주의 경제학에 친화적이고, 따라서 1980년 이전에 일반적이었던 정부 개입적 ‘혼합경제’로 돌아가는 것을 대안으로 본다.

이런 약점 때문에 경제사를 요약한 부분에서도 전 세계 주요 정부들이 ‘혼합경제’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돌아서게 된 이유를 장 교수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1970년대 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성장률이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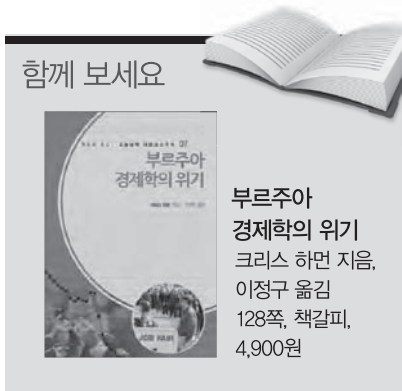
어져 신자유주의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뿐이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호황이 왜 성장률 하락으로 끝났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대안도 내놓을 수 있다. 1970년대 성장을 하락은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밝혔듯이 이윤율 하락 때문이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이윤율 저하 경향 때문이라면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장 교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 없이 가능한 선택만 고려하게 된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이런 비판을 고스란히 장 교수에게 돌려질 수 있다.

결국, 어정쩡한 대안에서 비롯한 무딘 비판이 이 책의 약점이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자인 고(故) 크리스 하먼의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책갈피)를 함께 읽으면 비판의 칼날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동훈



독자편지

9월 17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미국 퍼거슨 시 흑인 살인 사건이 드러낸 것 흑인들은 국가에 의해 매일 테러를 당한다

시카고에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사우스사이드를 걷다 보면 가끔 “파이브-오”(5-0)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다.

이 “5-0”라는 외침은 경찰을 봤을 때 쓰는 표현이다. 흑인 도시들에서 경찰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경찰들의 흑인 살인과 폭행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1950~60년대에 활동했던 흑표범당의 10개 강령 중 하나도 “우리는 경찰들의 흑인 폭행과 살인의 종결을 요구한다”였다.

미국에서는 퍼거슨 시뿐 아니라 모든 흑인 동네가 비슷한 상황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여전히 인종차별을 무기로 삼아 흑인을 공격한다. 사실, 28시간마다 한 명꼴로 흑인이 경찰, 혹은 ‘법과 정의를 스스로 실행하겠다’는 백인에게 살해당하기 때문에

(2012년 통계)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에 의해 테러리즘을 당한다’고 표현해야 옳다.

내가 살았던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에서 인종차별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억압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레이전 시절 미국 국가는 더는 흑인들을 교육에서 배제시킬 수 없게 되고, 흑표범당의 위협을 느끼자 중남미에서 CIA가 밀수한 코카인을 [값이 싼] 크랙 코카인으로 만들어 흑인 동네들에 뿌렸다. 그리고 닉슨이 유행시킨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흑인 동네들에 경찰을 배치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현재 상황을 통계로 한번 보자. 지난 10년간 학교 10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 국가는 50년 동안 꾸준히 학교 지원을 줄여 왔다.

시카고 흑인 청소년 중 92퍼센트

가 실업자다. 사우스사이드에는 일자리가 없다.

흑인 청소년 층의 체포 비율은 7.6퍼센트다. 이는 백인에 비해서 10배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체포 사유는 대마초 관련 범죄(소지 혹은 흡연)인데 실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비율은 백인과 흑인이 비슷하다.

미국의 수감자들은 시급 0.92달러, 즉 932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아예 돈을 못 받고 노동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이다. 즉 합법적으로 아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예처럼 [흑인들을] 착취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퍼거슨 지방 법원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3만 2천9백75개의 영장을 발부했다. 퍼거슨시 전체 인구는 2만

1천1백35명이다. 전체 인구 중 66퍼센트 정도가 흑인이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대상의 86퍼센트가 흑인이다. 이러한 영장을 통해 견어들이는 벌금도 흑인들의 ‘자본’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퍼거슨에서의 살인 사건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흑인들에 대한 착취, 국가의 테러리즘, 그리고 우리가 흑인 동지들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자본주의 제국인 미국은 제국과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 하나쯤은 지도에서 지워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동균 미국 시카고 거주 한인

경찰 폭력 감시 단체 ‘COPWATCH’ 활동가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3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8·18 노사합의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 투쟁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다

자본주의와 교육

상지대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www.
wspaper.
org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개악의 쟁점 —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공저자)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한 언론은 '이제 선거가 20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연금 개악을 주장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만들어서 계속 개악을 준비해 왔다. 최근에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승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열린 당정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내용은 연금을 20퍼센트 이상 삭감한다는 것이다. 역대 개악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월 평균 수급액 2백19만 원을 1백75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니 한 명당 평균 44만 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토록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 하는지 알려면 공무원 연금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적자'가 있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적자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00년에 정부 스스로 부족분은 정부가 채워 주겠다고 법 개정까지 했기 때문이다.

'킹핀'

공무원 연금은 소위 공공부문 '정상화'의 일부로 봐야 한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불링에서 하나가 맞으면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핀)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대표적인 '방만 경영'으로 여긴다. 겉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적자가 2조 원이고, 앞으로 박근혜 임기 동안 정부가 십몇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무원 은 소위 '철밥통' 논리로 공격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기업들을 살리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이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됐다.

지배계급의 처지에서 그 해결 방안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무원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 말대로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일까? 가령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직종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직종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조금도 관



공무원 연금 삭감에 이용되는 논리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8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심이 없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현행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방공무원들은 법으로 두텁게 복지를 보호받기 때문에 단결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2008년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평균 58.8세면 사망해 연금 수급권을 잃는다. 당시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57세였다. 연금을 2년도 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지난해 공무원 연금 통계를 보면, 소방공무원 중 연금 수급자는 7백18명에 불과하다. 이 중 제일 나이가 많은 수급자가 63살밖에 안 된다. 현직 소방 인력(4만 명)의 전체 공무원 대비 비율(4.3퍼센트)로 단순 계산하면, 총 연금 수급자 35만 7천 명 중 소방공무원 수급자는 1만 5천 명이 돼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공무원은 흔히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비 오면 수방대기 하고 토요일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느라 나오고, 요새는 매주 일요일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한다. 지난해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과도한 노동강도 때문에 자살했다.

심지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국가직 중앙부처 공무원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노조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가입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노조에 가입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어냐는 질문에 "더운데 에어컨도 못 트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더운데 땀 빼질빼질 흘려가며 일하고 추운데 난방도 안 해 주위에 손 비벼가면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철밥통, 신의 직장의 진정한 실상이다.

하향 평준화

정부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의 논리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리이다. 공무원 연금은 2백19만 원을 받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84만 원을 받는다.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내는 돈에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9만 7천 원을 내는 데 반해 공무원은 26만 1천 원을 낸다. 가입 기간도 공무원 연금은 30년 정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20년 정도다.

공무원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식인 것이다. 민간 기업의 퇴직금까지 고려한 수익비를 계산하면 제도상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에 대한 질서라는 의미로 '국민 정서'를 말한다. 물론 퇴직 후 2백만 원 정도 받으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길에서 폐지 안 주워도 그러저럭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국민 정서는 공무원 연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 기업에서의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또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 노동자 임금 삭감 문제가 쟁점이 된 때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것은 공무원 연금 삭감을 내세워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무원 '철밥통' 논리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하향 평준화를 뜻한다.

정부의 둘째 논리는 재정 적자 문제다. 앞으로 몇십조 원이 더 들게 돼 연금 제도가 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OECD 소속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현실, 노인들이 생계비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참한 현실이 문제다. 너무 낮은 연금이 문제인 것이다. 한쪽에는 국민연금 기금 수백조 원이 쌓여 있는데 재정 위기라며 연금 개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논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불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윤석명 연구원)

은 연금 받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 이상 늘어서 적자가 커졌으므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같다는 비열한 조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도 공무원 연금 통계를 보면, 공무원 연금 평균 수급기간은 9.6년밖에 안 된다. 1970년 연금 수급 개시 평균 연령은 45세였다. 그때는 20년 가입하고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받았다. 그때의 기대 수명을 계산하면 수급 가능 기간이 26년이었다. 그런데 2010년은 수급 개시 평균 연령이 58세가 됐다. 그래서 수급 가능 기간이 남성은 24년, 여성은 29년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연금 받는 기간은 거의 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의 미래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공격해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공격하려고 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저렴하게 착취할 수 있게 해 주려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민연금도 개악하고 싶어한다. 지난해 7월경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악안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나왔다. 때마침 기초연금 논란이 터지면서 지금 약간 뒤로 미뤄 뒀을 뿐이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연금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에는 연 4천만 원 이상 연금을 받아야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이제는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걷겠다고 한다. 대부분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만큼 연금은 삭감된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내게 하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전반에 관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연금 전체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또,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값은 활동가들도 있다.

철도 투쟁이 막 끝난 지난 1월 공무원노조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40퍼센트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연가파업이나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파업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도 없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얼마나 우려가 큰지 보여 준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우리 노동자의 미래다. 함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다.